인근 상인 영업손실 보전 미적…매듭짓지 못한 피해보상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년

상가 87곳 중 35곳 합의점 못 찾아
"안전대책 없는 철거·재시공 땐 2027년 준공까지 비산먼지 피해"
대책위,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현대산업개발·서구청 "대책 검토"

화정아이파크 피해자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이 10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인근에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관할청인 서구청에 비산먼지 저감 등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은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과 입주예정자와는 지난해 피해 보상 협의를 마쳤지만 붕괴사고 현장 인근 상가 35곳이 여전히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철거·재시공 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피해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피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0일 관할청인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상가 피해보상은 붕괴사고 직후 45~69일간 사고 현장 인근 출입이 통제되면서 가게 운영을 못 해 발생한 매출액, 인건비, 유지비 등 영업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에서 이뤄진다. 보상액은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상가별 피해 규모 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피해보상 대상 상가는 총 87곳으로, 이 중 현대산업개발은 상가 52곳과만 보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전체 상가 3분의 1에 가까운 35곳과는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사고동인 201동에 가장 근접한 금호하이빌 상가는 42곳 중 절반이 넘는 28곳이 보상 협의를 마치지 못하는 등 정체된 상태다. 나머지 상가 7곳 중 5곳은 "보상 요구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청에 따르면 금호하이빌 28개 상가는 화정아이파크 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보상 협의를 일임하고 있다. 이들은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줄곧 협상을 거부해 오다 지난해 12월께에야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은 또 "보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낼 일이 아니며, 철거 후 재시공까지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대책까지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붕괴사고 발생 이전은 물론 최근 안정화작업 진행 과정에서도 비산먼지가 날려 주차된 차량이나 상품 등에 뿌옇게 내려앉는 등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철거·재시공이 이뤄진다면 준공 예정일인 2027년까지 상인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이날 붕괴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산먼지 저감 등 안전 대책 없이 철거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정화작업에 쓰였던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우(DWS) 공법'을 철거 과정에 재차 적용했다간 비산먼지 피해가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8개 동 철거 과정에서 DWS공법을 제외해달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과 서구청은 영업손실 외에도 철거·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안 등 대책 논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영업손실 외 피해보상은 87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해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까지 모든 피해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손해사정사 선정 등 절차에서 마찰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 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이파크 철거 업체, 독일 '페리'사 선정

3월부터 철거 시작 내년까지 완료
압쇄공법·다이아몬드 절삭법 병행

HDC현대산업개발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39층 초고층 건물을 해체할 철거 업체로 독일의 건설업체 '페리(PERI)'사를 낙점했다.

광주시 서구청은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있었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업체로 독일의 건설장비 업체 '페리'사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페리사는 벽체 건설용 대형 콘크리트 거푸집을 생산·보급하고 건축·해체 작업 경험이 풍부한 회사로, 화정아이파크 시공 당시에도 이 회사의 RCS(Rail Climbing System) 폼이 사용됐다. RCS는 레일로 연결된 벽체 거푸집으로 일종의 작업 발판으로 활용된다.

서구청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한국구조기술사회 리빌딩추진단을 통해 여러 해외 업체들의 해체 작업 능력을 검증했는데, 이 중 페리사는 구조적·시공적 안전성을 유지하고 주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가장 우수한 철거 능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본격적인 철거는 오는 3월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서구청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3일까지 해체 심의를 받는다. 이후 2월까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고, 이후 광주고용노동청에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철거 작업은 8개 동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한 층을 철거하는 데는 14일 가량이 소요된다. 최상층부터 천장·벽체·기둥·바닥 순서로 철거해 내려오는 하향식으로 이뤄진다.

천장·바닥과 벽체는 굴삭기를 올려 압쇄 공법으로 부수고, 기둥은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우'(DWS) 공법으로 잘라낸다. 이 과정에서 해체용 RCS 폼을 3개 층에 걸쳐 쌓고 천으로 덮은 뒤 여과집진기를 설치해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철거 작업 기한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이며 재시공은 2027년까지 이어진다. 다만 비산먼지 등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작업을 일시 중단하므로 철거 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고 서구청은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전비, 공·육 합동 무인항공기 대응 훈련 실시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한 사건과 관련,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이 무인항공기(드론) 침투와 테러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1전비는 공군과 육군의 합동대응절차 숙달과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10일 공·육 합동 무인항공기 대응 훈련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기지 주변 공중에 날고 있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됐다. 무인항공기 발견신고를 접수하자 기동전력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키고 지역책임부대인 육군 비호여단에 상황을 전파, 5분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급히 출동시켰다.

현장에 출동한 대응팀은 항로를 추적해 무인기 조종사의 신병과 무인기를 회수한 후 정보분석을 실시했다.

류민아 1전비 기지방호작전과장은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해 공·육 합동 대응태세를 굳건히 해 대공 방호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10일 공·육 합동 무인기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광주·전남 경찰청 소속 6명 총경 승진

경찰청은 10일 광주경찰청 양백승 경무계장, 전남경찰청 이정호 정보상황계장 등 135명을 총경 승진 임용예정자로 내정, 발표했다.

광주청에서는 양 경무계장 외에 전병현 감찰계장, 양수근 강력계장이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예정자에 포함됐다.

전남청에선 박종호 수사심의계장, 김대원 생활안전계장이 총경 승진 예정자에 이름을 올렸다.

양 경무계장은 광주 진흥고를 졸업하고 1989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광주청 생활질서계장, 인사계장 등을 지냈다. 광주 서석고를 졸업한 전 감찰계장은 1994년 학사경장 특채로 입문해 전남청 사이버수사대장, 광주청 과학수학계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대 출신인 양 강력계장은 광주청 과학수사계장, 광역수사대장을 거쳤다.

이 정보상황계장은 1995년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와 전남청 112상황팀장 등을 지냈고, 박 수사심의계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전남청 강력계장을 역임했다. 김 생활안전계장은 간부후보생으로 전남청 인사계장 등을 거쳤다.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총 6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 하나의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도록 하는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총경 인사폭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청별 총경 승진자는 서울경찰청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본청 24명, 경기남부 11명, 부산 9명, 대구 6명, 인천·경남·강원 각 5명, 충남·충북·전북 각 4명 순 이었다. 이에 비해 광주·전남은 각 3명에 그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원에 불과하고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010-6670-9800

상가매매(상무지구)

(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

▶ 중심 상업지구
(유흥 적합)

(6층, 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

보3천 월 380만 (융 4억5천)

010-2614-9801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